

◀ 목 차 ▶

I. 대표 발제

- 노무현 정부 3년 정치·안보 분야 평가 / 11
- 김 태 효(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노무현 정부 3년 경제·사회 분야 평가 / 22
- 윤 창 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바른사회시민연대 사무총장)

II. 현장 보고

- 김정일 독재정권 살찌우는 노무현 정권 / 47
- 김 태 산(자유북한방송 기자/前 북한내각 경공업성 책임지도원)

- 盧정권의 교육정책, 문제 많다! / 65
- 두 영 택(남성중 교사/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

- 서민 죽이는 참여정부 / 74
- 김 효 선(주부/나라사랑실천운동 운영위원)

- 盧정권은 정녕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꺾으려는가! / 92
- 김 경 옥(경북대 4/경북대 희망학생연대21 부회장)

노무현 정부 3년 정치·안보 분야 평가

김태효(성균관대 교수)

1. 외교 모토의 규범 과잉

□ 동북아 중심 국가, 동북아 시대 주창

- 역내 긴장완화 충족되지 않은 시점에서 주변국들의 의혹 불러일으킴
- 다자주의 협력에 대한 일방적 기대, 주변국의 호응 미비

□ 균형적 실용외교의 개념과 실체에 대한 혼란

- 상대방에 대한 균형인지, 이슈와 상황에 대한 균형인지 균형의 대상 불확실
- 동북아균형자론 제기時 미국의 역할과 한미관계 위상에 대한 사전 공감대 미비

2. 대북정책의 특수성에 집착

□ 북핵문제의 와중에 한반도 돌발사태 방지에 절대적 가치 부여

- 북한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압박도 반대하다 보니 6자회담 교착, 한미관계 악화 초래
- 북한 인권문제 외면, PSI 소극적 대응, 위폐 사태에 북한 두둔하는 태도 야기

□ ‘대북지원 및 남북교류의 확대’는 무조건 **선**이라는 명제 고수

- 대북정책의 투명성은 제고되었으나 정책결정의 획일성, 일방주의는 오히려 강화
- 북한정권과의 정책 공조를 남·북 신뢰구축의 열쇠로 간주, 상호주의와 북한 개방에 미온적

3. 현안 따라가기에 급급한 4강 외교

□ 한미 신뢰관계의 총체적 난맥상 초래

- 핵문제 해결보다 북한붕괴 방지에 우선,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간 불신 고리 고착화
- 이라크파병, 방위비분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PSI, 작전계획 5029 등 한미관계의 비전 없이 현안별 협상에 치중

□ 동북아 주변국 관계에 이중 잣대 적용

- 對日 관계에는 과거사 문제에 몰입하는 규범적 접근
- 對中 관계에는 중국의 반응 살피는 사대주의적 접근
- 對러 관계에는 에너지협력에 대한 기대 외에 구체적 전략비전 부재

4.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한국의 외교정책성 정립 시급

□ 무한경쟁의 국제시대에 국내정쟁의 무한경쟁 반복

- 시장 중시,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선진국들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 지향
- 한국정부는 기득권 타파, 양극화 해소, 남북체제 통합을 위한 국내정치에 몰입
- 이상적 민족주의, 감성적 대중주의의 한계 극복할 비전과 전문성 결여

□ 통일정책의 모호성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잠식

- 북핵 해결 실패,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태세 구축 거부
- 김대중 전대통령 방북추진, 여전히 엇보이는 이벤트 위주의 포퓰리즘 추구

참고자료

‘한나라당다운’ 대외정책의 모색을 바란다!

현 정부 3년 집권기의 외교실적은 대단히 야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어느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정부가 외교를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응답자가 30%를 넘는 경우가 없다. 대외관계에 대한 설문에 응할 때 국민의 절반 정도는 으레 그러저럭 잘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 관례이건만 지금 많은 한국인들은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의 한국의 앞날이 불안하다고 판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외교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대답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다. 정부와 여당의 외교기조를 좋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알겠는데 어떤 대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꼭 집어 지적하려면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은 불투명하고, 한·미 관계의 마찰 징조는 계속 드러나고, 동아시아의 협력질서는 언제 자리 잡을지 기약하기 힘든 처지에서 한국이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무얼 어떻게 해야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는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제시를 담당해야 하는 야당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석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나라의 대외관계가 올바르게 잡리도록 하는데 얼마나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자성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이제는 8년 가까이 야당생활을 해 봐서인지 비판에는 능하다. 여당이 지지하는 대외정책이 논란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에 비판할 거리들도 늘 풍부했다. 그러나 이제는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당 지지자들과 지식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국가외교의 장래 비전을 얘기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하려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정책이 무슨 도전요인에 처해 있는지 진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한나라당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외교를 천대하고 국내정치에만 몰입하는 태도가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지금 한국정치는 이미 대선정치에 빠져들고 있다. 내년 12월 결판날 진검승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올해에 치를 정치 일정이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새롭게 선출한 데 이어 당내 체제정비에 돌입한 상태다. 당 쇄신의 주요 목표는 사학법 재개정 투쟁을 이어가고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한나라당이나 이를 무력화하려는 열린우리당이나 누구라도 여기에서 밀리면 그 다음 판세에서 만회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어질 2월의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5.31 지방선거는 2006년 상반기의 정치 지형을 규정함과 동시에, 올 하반기 및 내년도의 후속 대선전략 지침을 확정토록 하는 또 다른 방향타를 제시할 것이다. 차기대선 후보주자들의 지지도 추이가 시시각각 제시될 때마다 국민들은 저마다 동물적인 감각이 가미된 예언적 시나리오 하나쯤은 그려보았을 것이다. 다음 정권을 어느 후보와 정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다음 진로가 결정된다고 볼 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나 나라를 위해서나 대선을 위한 정당정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평상시의 정당정치가 대선을 준비하는 '기획정치'에 지나치게 매몰될 경우 한국정치는 국내정치의 과잉에 시달릴 공산이 커진다.

지금 신경 써야 할 중차대한 외교 이슈가 얼마나 많은가. 매년 새해를 맞을 때마다 올해야말로 북한 핵문제의 고비가 될 것이라고 14년을 되뇌어왔건만 2006년도 역시 북한 문제로 인해 어려운 판단과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

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왜 6자회담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소신 있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올해부터 일년에 한 번 이상 한·미간 고위급 전략 대화를 열기로 하여 그 첫 시작이 1월 19일 워싱턴에서 있는데도 정부가 무얼 어떻게 염두에 두라는 충고 정도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바탕 싸우면서 화해를 거부하는 자존심 대결을 지속하는 한·일관계도 마찬가지다. 또 미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중국과의 통상협력방안 협의 등 챙겨야 할 경제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제정치 현안을 도외시키고 국내정치 승부에 올인(all in) 하는 처사는 그 배경을 이해할 때 공감은 간다. 단기간 내에 돌아올 정치적 열매를 겨냥할 때 국내정치는 늘 국제정치의 우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여당의 정치행보가 단순히 몇 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차원을 넘어 뭔가 크고 ‘위험한’ 사회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야당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교도 결과만 좀 더 늦게 나타날 뿐이지 그릇된 정책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나라에 불행을 초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은 국내정치 영역보다 국제정치 쪽이 심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 혼자서 결정하면 금방 바뀔 사안이 아니기에 결과를 되돌리기도 어렵다. 국제정치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국제정세를 분석하고 대비하는 쪽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 다음에 따라야 할 또 한 가지의 고언(苦言)은 국제정치 현안을 다루더라도 이를 국내정치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이슈를 국내 정치이익을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국제정치는 포폴리즘의 장(場)으로 전락하고 만다. 여론의 지지도를 염두에 두는 인기관리 수단으로 외교를 다루면 이상주의 외교에 빠지기 십상이다. 국가이익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대답이 나오는데 대중여론은 감성에 도취되는 경우가 흔하다. 전략론을 펴야 할 때 도덕론을 펴고 마는 외교담론이 비일비재한 이유가 그것이다. 여당이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마다 한나라당도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편승해 온 것이 문제다.

2002년 여름의 월드컵 응원열기가 주한미군의 여중생 과실치사 사건에 대한 타도의 열기로 이어질 때 한나라당은 기나긴 침묵을 지켰다. 나중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도 불안하다는 판단에 부시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에 동참함으로써 국민과의 공감대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경계했다. 12월의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반미여론에 반하는 설득 정책을 펼 경우 한나라당이 고립을 자초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여, 야가 모두 반미감성에 호소한 결과 ‘포폴리즘의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한나라당에 돌아온 반사이익은 없었다. 오히려 여중생 사건이라는 특정 이슈를 한·미관계라는 보편적 이슈와 차별화하는 가운데 야당 차원의 설득정치를 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다.

정권 탈환에 실패한 후 진보노선 여당의 집권 2기에 들어서도 한나라당의 보신주의는 여전하였다. 2003년 2월 이라크전쟁이 터졌을 때 그 불똥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처벌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한국사회에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반전(反戰)·평화론을 국내정치의 핵심쟁점으로 자리잡게끔 하였다. 이라크의 혼란이 길어지고 미국이 9월경 한국의 추가파병을 요청하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공세는 더욱 드세어졌다. 한국정부는 일찌감치 제2차 이라크파병 방침을 세워두고서도 이듬해 2월의 대통령탄핵, 6월의 김선일 피살사건을 겪으며 반미주의, 파병반대 운동의 격랑 속에서 1년씩이나 최종결정을 미루었다. 그 와중에 여, 야는 모두 결국 해야 할 파병을 여론의 질책을 피해 결행할 수 있는 시점을 기다리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소에는 한국 외교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이 터지면 여론의 향방을 관찰하고 이를 좇는 제1야당 한나라당의 행태는 최근에 와서야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정부가 못 본채 하면 이를 질타한다든지, 한국의 대북·대중 편중외교 노선이 한·미관계를 그르칠 수 있다든지 하는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대외관계의 정도(正道)를 표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또 정부가 중장기 국방개혁과 차기 대북교류협력사업과 같은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을 입안하고자 할 때, 이의 적실성을 검토하는 공청회와 토론회도 부지런히 개최해 왔다. 하지만 외교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전문성(professionalism)이다. 그래야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발전적 대안으로 가기 위한 비판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 감각을 지녔으면서도 한국의 올바른 외교 전략을 궁리해 낼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이 한나라당의 외교 강령을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국제정치 현안을 국내정치 담론으로부터 떼어내어 본래의 제 위치에 돌려놓더라도 한국과 국제정치의 상호관계를 균형 있게 자리매김할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외교비전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성에 더하여 그 자체로서 논리적 타당성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에 타당하면서도 납득하기 쉬운 대외정책론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작년 이맘 때 북한의 핵 보유 선언이 나왔을 때 한반도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컸어도 당시 사태를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미미했다. 설사 논의되더라도 걱정되는 한반도 위기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수세적인 발상에 급급하였다. 결국 8개월간의 밀고당기기식 협상 끝에 제4차 6자회담의 결과로 9.19 공동선언이 나오자 한나라당의 주요 반응은 환영하지만 실천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논평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하고 향방을 궁금해 하는 사안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향후 대응까지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입체적인 분석을 내려야 한다.

북한의 핵 집착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 때문인지, 대·미관계를 돌파해내기 위한 외교적 카드 정도로 보면 되는지, 아니면 김정일 정권의 통치력의 존폐를 가름하는 본질적인 대목과 맞닿아 있는지 파헤쳐야 한다. 그래서

북한 핵문제가 정치성을 다분히 내포한 딜레마적 상황에 빠져 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줄도 알아야 한다. 한국이 그러한 6자회담의 교착상황에서 북한을 옹호하든 압박하든 북한정권 스스로의 사고의 경직성으로 인해 문제가 꽤 오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6자회담에서의 협상 노력과 별도로 북한사회의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왜 위험한 일이 아닌가를 설득할 수 있게 된다. 북한 지도부가 애당초 핵무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연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도, 한국이 당장 눈앞에 펼쳐질 북한의 반발이 두려워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등지는 것은 결국 한국의 외교적 입지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심층 분석과 논리적 설명을 거쳐, 한나라당은 한국정부의 북한인권 논의 참가를 촉구하는 정책 캠페인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결과를 모른 채 북한 감싸기로 일관하여 한·미관계의 악화를 무릅쓰느니, 한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미간 신뢰관계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북한의 변화를 여유 있게 기다리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점을 표방할 수 있게 된다.

한 발 더 나아가 한나라당이 야당다운면서도 보다 성숙한 대외정책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펼 줄도 알아야 한다. 남북교류의 증대가 남북관계의 발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북한이 남한의 대북지원을 악용할 경우 올바른 남북관계는 오히려 미뤄질 수 있고 대한민국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정부가 대북사업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에 멈추지 않고 전력공급, 물류유통, 정보통신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여당이 이에 동조할 때, 결국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떠안게 될 당사자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분석해 줘야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남북한간 신뢰회복과 동질성 구축의 원칙에 부응하는 북한의 정책대응이 발생할 경우에만 대북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을 역설해야 한다. 그것이 아닐 경우 무정책(無

政策)이 오히려 현명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 제공과 대안 제시 능력에 더하여 하나 더 구비해야 할 덕목은 바로 장래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비전이 될 것이다. 반(反) 테러리즘, 북한 핵, 한·미관계, 대중관계, FTA 등 한국이 당면한 외교현안을 현재의 시점에 비추어 이익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너무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할 경우 길게 보고 지향해야 할 외교목표를 망각하거나 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방위비 분담금 감액, 전시작전권 환수의 추진 등 한·미동맹의 평등성 강화를 지나치게 서두르면, 한·미간 신뢰관계에 타격을 주거나 장차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동북아시아에서의 외교적 지렛대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긴 외교 구상을 당장 한 번의 대통령 임기 내에 관철시키고자 서두를 경우 현재 지켜내야 할 중요한 외교적 자산을 희생시키는 꼴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안팎으로 충분히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나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진할 때 국민들은 분열되고 한·미관계는 타격을 입을 것이다. 동아시아의 경쟁질서가 혼란스러운데도 한가롭게 동북아 평화국가와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논쟁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도모해야 할 국가 에너지가 분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아직은 국가안보의 중추적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한·미동맹 중심의 양자주의를 제쳐두고 다자주의를 우선시하고자 할 때, 주변국들이 과연 같은 이상주의적 발상으로 호응해 올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이 이제부터라도 앞장서서 한국의 국제정치 현안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할 때, 그리하여 외교의 영역이 더 이상 국내정치의 권력다툼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할 때 한국외교의 진정한 담론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담론이 현실 정책에 대한 균형 있는 비판과 해안을 갖춘 대안정책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비로소 한국외교의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어떻게 하면 야당의 외교비전을 야당만의 비전이 아닌 한국 전체의 공통비전으로 승화시키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현 정부와 여당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나라당의 지지자는 아니다. 또 뉴라이트 운동에 뛰어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갈망이 나라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온전한 양심으로만 무장했으리란 보장도 없다.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한나라당은 지지자의 규합에 더욱 투신하게 될 것이다. 지지자를 모으는데 급급하여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외교정책 기초를 수정하거나 거두어들이는 우를 범해서는 곤란하다. 잠시 균중들이 현혹되어 지지하는 외교는 국가의 비전이 아니다. 몇 개월 남짓한 시효의 인기를 뿌리칠 수 있으려면 장기적인 열매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 필요하다.

야당적이기만 한 외교가 아닌, 한국인들의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설득의 외교가 바로 향후 한나라당이 추구해야 할 가장 한나라당적인 외교가 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 3년 경제·사회 분야 평가

윤창현(서울시립대 교수)

I. 참여정부의 출범 배경과 철학

1. 트렌드에 대한 반작용적 의미

- 외환위기 이후 국내경제에는 세계화와 양극화라는 트렌드가 자리 잡은 상황
- 이 상황 하에서 세계화에 대항하는 반미의 화두와 양극화를 분배로 해결 하겠다는 분배의 화두를 가지고 출범한 정부
- 흐름(=작용)에 대한 반작용적인 특성
 - 큰흐름을 인정하고 쫓아가는 ‘작용적’ 전략보다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 하는 ‘반작용적’ 전략에 익숙
 - 자본주의 : ‘가진 자’를 안심시켜야 하는 과제 ⇒ ‘가진 자’의 불안이 지속
 - 일정 계층을 ‘敵’으로 규정하고 소수의 ‘적’에 대한 다수의 분노라는 분열의 에너지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전략
 - 필요時 집권층 스스로가 ‘적’의 음모의 희생양으로 자처하는 피해자적 시각 까지 제시

2.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문제

- 노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밝힌 대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역사”라는 역사인식이 경제정책의 근간에 자리잡고 있고 이는 특히

부동산 교육정책 보건의료 과거사청산 등의 정책에 깊숙이 녹아들어가서
실행되고 있음

□ 이는 부와 지식 명예 등 기준에 쌓여있는 것(스톡)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표출되어 反엘리트주의의 심각성이 제기됨

- 강남지역·조선일보·삼성·서울대·검찰로 상징되는 소위 ‘과거에 잘나가던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표출
- 그 부정적 인식이 여러 형태를 통해 표출이 되어 경제 사회내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형국
- “내가 아픈 것은 네가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의식이 확산되면서
갈등과 증오로 표출되고 이러한 사회분열(social fission)의 에너지가 이
정권의 지지층을 확산시키면서 정권을 지탱하는 운동력이 되고 있음

□ ‘국가보안법 폐지 및 과거사법 제정 추진, 의문사위의 비전향장기수 민주화
기여 인정, 좌익계열 독립운동가의 서훈 추진’ 등을 둘러싼 보수-중도-진보
세력간 갈등 심화

- 이밖에 노사모 등 親盧 성향의 시민단체가 주도한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이라크 파병 반대 집회에서의 이념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었
고, 최근 사학법, 신문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의 사학재단 및 언론사의
반발 등 지난 2년간 국민갈등이 고조되어 왔음

※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의 리더쉽

- ① 기성정당을 공격하라
- ② 유권자를 양극화하여 중도성향 유권자를 쪼개라
- ③ 선거에 이길 정도의 표만 확보하면 된다
- ④ 부는 선택적으로 분배하라

- ⑤ 관료제는 부패하게 놔두라
- ⑥ 통제가능한 정도의 혼란을 유지하라
 - 어느 정도의 갈등을 부추기면 국가개입을 원하게 됨
 - 경제는 장기경쟁력제고보다는 일부계층 보조금 지급 등 대증요법 중심으로
- ⑦ 反美 정서를 이용하라 : ‘수퍼파워 때리기’는 지지자를 결집시킨다

□ 건국과 산업화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주입

- 대한민국의 건국세력을 분단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개념으로써 부정
- 자랑스런 산업화세력을 독재세력으로 규정하고 민중의 개념으로써 부정

3. 공공 만능주의(진보적 국가주의)

□ 사학법 개정의 사례

- 지자체 행정기관 등 사회 각 부문에 비리는 항상 존재함
- 사학비리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데 비리 치유를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킴
- 사적영역의 문제를 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공공 영역이 즉시 침범해들어 가는 과정이 지속됨
- 국립대 총장선거를 선관위가 주관하도록 하는 것도 비슷한 사례

□ 신문법개정

- 정부예산을 들여 군소 언론사에 보조를 주면서까지 대형언론사를 국가가 견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음

□ 큰 정부지향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제적 흐름을 무시한 채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로 조직을 늘이고 인원을 확충해가고 있음
- 그 결과 재정건전성 악화 국가부채 증가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II. 참여정부의 정책의 문제점

1. 복지국가로의 이행 과속

□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

- 2004년 기준 한국경제는 총 국민소득 세계 12위 일인당 소득 세계 34위 권에 머무르고 있는 바 12위와 34위의 괴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중요함
- 일인당 소득 4-5만달러수준의 국가와 복지수준을 비슷하게 가져가기는 힘들며 아직도 2-3만달러 소득 수준으로의 진입이 매우 중요한 시점

□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의 사례

- 이 제도에 의한 예산지출액수는 시행초기인 2001년에 3조 1,499억원으로 시작하여 2004년까지는 3조 6,192억원으로 안정세를 보이다가 2005년에는 4조 6,524억원으로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상승하였고 2006년에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5조 3,72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음
- 한번 늘이면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영구채권적 성격을 가지는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함

2. 경제부문의 불확실성 증가

- 집권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정권이 출발한 후 출범 첫해부터 구체성 없는 로드맵 작성에 자원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고 있음

- 참여정부 2년간 제시된 100개의 국정과제 로드맵은 우선순위, 추진기간, 소요예산 등 구체적 프로그램이 결여된 채, ‘동북아 경제중심’, ‘국민소득 2만불’ 등 공허한 비전만 제시
 - 그 실체와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로드맵 정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실정
-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하에서 국가역량의 ‘선택과 집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우선순위도 별로 없이 ‘백화점식’ 정책 나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 'NATO(no action talk only) 정권'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회자될 정도임
- 100개 로드맵 중 임기내 실행이 완료될 예정인 것은 60개에 불과할 정도이고 40개 정도의 로드맵은 참여정부 임기내에 마무리도 못할 것으로 보이는 바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로드맵을 위해 지나친 노력이 들어가고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기업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실제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기업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된 실정

노무현 정부에서의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한국전력공사	발전부문 매각 중단, 배전부문 분할 중단
한국가스공사	도매부문의 민영화 계획 중단
지역난방공사	지분매각 잠정 유보
철도	공기업화로 방향 전환

3. 명분론에 입각한 행정규제의 강화

□ 사례 : 출자총액제한제도, 수도권 입지 규제, 금융계열사 의결권 한도 축소, 공정위 계좌추적권 재도입 등

□ 참여정부의 정부규제 강화 성향을 반영하듯, 전경련이 조사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서 2001. 8월 29.5%였던 ‘부정적 평가’가 2004. 9월에는 83.1%로 2배 이상 폭등함

4. 서민생활환경의 악화

□ 서민생활관련 주요 통계현황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02년 대비 04년 증감
단전가구수	3,954	2,748	2,873	1,242	1,689	3,539	1,091	4,827	-35.4%
단수가구수(만가구)	5,035	5,765	9,360	8,923	9,594	16,021	21,067	11,829	120%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에 따른 임대계약 말소(건수)	33	23	61	69	46	150	148	11	222%
건강보험급여제한 가구(천세대)	-	-	-	1,360	1,026	1,059	1,286	1,003	25.3%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천건)	-	-	199	233	254	278	873	171	244%
자산관리공사공매건수	2,984	4,169	4,522	5,063	6,044	6,840	9,677	5,964	60.1%
개인파산 신청건수	-	-	329	672	1,335	3,856	12,317	11,088	823%
체불임금(억원)	12,185	5,704	6,118	8,897	3,461	5,211	10,426	5,858	201%
경제문제로 인한 자살건수	-	-	-	844	968	1,157	1,197	-	23.7%
경제문제로 인한 가출건수	-	-	-	2,937	2,444	2,898	2,893	1,015	18.4%

□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2년간 법원 경매물건이 52.5% 급증하였는 바, 이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음

- 특히, 주로 서민이 주거하는 연립주택의 경매 건수가 218.8% 폭증하여 서민의 생활 기반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임
- 경매 물건의 경우 연립주택 218.8%, 업무용시설 216.6%, 숙박시설 173.3% 증가

□ 더욱 심각한 것은 2005년 6월말 현재로 볼 때 경매물건이 이미 2005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섰는 바, 서민경제 붕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연도별 법원 경매물건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5년 6월말	02년 대비 04년 증감
아파트 소계	95,449	81,506	63,690	74,802	114,595	72,693	79.9%
연립 소계	100,723	61,223	36,820	54,976	117,397	62,593	218.8%
주택 소계	79,733	54,980	32,547	33,679	42,436	22,304	30.4%
근린 소계	81,776	80,781	49,598	48,735	65,166	37,110	31.4%
업무시설 소계	6,091	2,030	751	876	2,378	3,494	216.6%
공장 소계	11,196	10,482	7,076	8,111	10,298	5,023	45.5%
숙박시설 소계	1,756	1,725	865	939	2,364	1,699	173.3%
토지 소계	149,728	154,925	103,927	101,409	94,989	44,093	-8.6%
기타 부동산 소계	3,945	4,959	5,208	6,338	7,123	2,974	36.8%
차량외 기타	12,915	7,607	4,738	5,506	8,609	4,497	81.7%
총 합계	543,312	460,218	305,220	335,371	465,355	256,480	52.5%

자료 : 디지털태인

5. 양극화의 심화

□ 양극화의 심화는 투자 부진 등으로 인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세계평균 대비

낮은 성장률을 보인 데에 기인한 바가 큼

- 그러나 이를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실리 챙기기를 시도하고 있음

□ 2006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증세를 언급하고 일주일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증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 때문에 추진하기가 힘들다는 언급을 함

- 양극화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기득권 세력의 방해 때문에 어렵다는 뉘앙스를 풍김으로서 양극화의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정치적 실리까지 고스란히 취하는 상황
- 양극화를 강조하는 흐름에 대해 이를 되받지 말고 달리 대응 필요
- 선진화의 추구 혹은 건전한 중산층의 육성 같은 구호를 통해 네가티브 캠페인에 대해 포지티브 캠페인으로 수준 높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전 세계 평균과 한국경제의 성장률 비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비 고
대한민국	8.5%	3.8%	7.0%	3.1%	4.6%	사상 최초 2년 연속 세계 평균 성장률에 미달
세계평균	4.6%	2.5%	3.0%	4.0%	5.1%	

□ 아시아 국가와의 성장률 비교

구 분	한국	주요 아시아 경쟁국						아시아경쟁국 평균과의 차이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평균	
03년	3.1%	9.3%	3.3%	4.9%	5.3%	3.1%	5.1%	2.0%
04년	4.6%	9.5%	5.8%	5.1%	7.1%	8.3%	7.1%	2.5%

□ 양극화 소득배율

구 분	IMF위기 당시		‘국민의 정부’ 중후반기			참여정부이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년 1/4분기
5분위 배율	5.41	5.49	5.32	5.36	5.18	5.22	5.41	5.87
10분위 배율	9.41	9.34	8.86	8.78	8.25	8.93	9.30	10.26

6. 은행산업을 외국자본에게 상당 부분 내주기

□ 金·産 분리의 원칙이 도그마로 작동

- 다른 나라에서는 銀·産 분리(은행과 산업의 분리) 정도로 인식되는 金·産 분리의 원칙이 우리나라에서는 카·産 분리(카드와 제조업의 분리) 保·産 분리(보험과 제조업의 분리) 수준으로까지 실행되고 있음
-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단순투자펀드형 투기자본에게까지 은행을 인수하도록 함

□ 현재 우리 경제에서는 주주자본주의 중심으로 가면서도 은행중심 금융이 나타나는 모순적인 흐름이 정착되고 있음

- 은행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하면서 은행 對 非은행의 비중이 자산기준 4:6에서 6:4를 거쳐 7:3으로 가는 분위기
- 한미, 외환, 제일은 외국자본으로 넘어가고 국민은행 82%, 하나은행 68%, 신한 65%의 외국인 지분율에서 보듯 우리은행 빼고는 모두 외국자본이 장악
⇒ ‘관치금융’에서 ‘외치금융’으로

□ 산업자본의 금융진출 不可라는 도그마적 명제에 의해 산업자본을 금융산업

에서 배제

- 산업자본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채택한 나라에서 산업자본을 재벌이라는 이유로 '서자' 취급하는 분위기
- 범한류자본의 형성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외환위기이후 은행의 행태변화

- 기본적으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에만 치중
- 정부의 암묵적 보증과 이에 따른 자금의 집중 편중지원은 불가능
-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결과 은행에 대한 정부통제가 힘들어짐
- 외국인의 은행산업 장악으로 소매금융 중심전략과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정착되면서 독과점행태의 표출(2005년 13.7조원의 이익)

□ 은행의 독과점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결제기능과 대출기능의 분리를 통한 내로우 뱅킹 논의의 필요성 증대
- IT의 발달과 DB 사용이 자유로워지면서 결제기능 중심으로 은행산업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매우 유리해짐
- 금융산업에 산업정책은 없고 구조조정정책만이 존재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함

7.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지나친 편향과 그 부작용: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 대응책 미흡

-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마치 하나의 정답이 있는 듯 모든 기업에게 하나의 모형을 모범답안으로 간주하여 일률적으로 유도하는 분위기가 나타남: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

- 한국경제의 발전이 수출주도형 불균형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었고 이에 따라 육성된 것이 소위 대기업집단이었음
-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전문경영인에 의해 사외이사중심으로 운영되는 미국 GE의 예가 베스크 프랙티스가 되면서 이를 하나의 모범기준으로 제시하고 모든 기업에게 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나타남
- 기업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없으며 다양한 지배구조를 가진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망각한 조치임
- 가족경영 내지는 오너경영의 장점과 소유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한 전문경영인 체제가 하나의 경제내에 잘 혼합되어 나타날 필요가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집단의 경우 업종과 크기를 불문하고 부채비율을 200%로 강요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부채를 갚는 전략이 광범하게 시행되었고 이 결과 대주주의 지분은 상당부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SK와 소버린의 분쟁 나아가 최근 KT&G에 대해 칼 아이칸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등 우리가 애써 키워온 기업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음
-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에 대항할 수 있는 포이즌 필 조항이나 5%룰을 보완조치 등 각종 방어장치를 도입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종합무역법 내에 엑손-플로리오 법안을 이용하여 국가기간 산업에 대한 M&A에 대해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8. 재정건전성 악화와 국가부채 증가 심각

□ 정권별 국가부채 변동 추이(단위: 조원, 만원,%)

(출처: 이한구 의원실)

구 분	92년말	97년말	02년말	05년말	YS정부 증가		DJ정부 증가		노무현정부 증가	
					5년간	연평균	5년간	연평균	3년간	연평균
국가직접채무	41	60	134	242	19	3.8	74	14.8	81	27
1인당(만원)	94	131	280	515	37	7.4	149	29.8	235	78

- 주1) 1992년 국가부채는 지방정부 부문(지방정부채무-지방정부의 對중앙정부 채무)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94년 이후 추이를 고려하여 약 10조원 규모로 추정하여 국가직접채무(중앙정부채무 31.0조원+ 지방정부 부문 약 10조원) 추산
 2) 1992년 1가구1수 자료 산출되지 않아 2000년의 추계인구 및 추계가구수를 고려하여 추산

□ 국가채무변화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음

- ① 2006년 270조6000억원
- ② 2007년 282조9000억원
- ③ 2008년 291조9000억원
- ④ 2009년 301조5000억원

□ 2004년의 경우 통합재정규모는 183.4조원으로 참여정부 출범이후 34.9% 급증한 반면, 국내총생산 증가는 14.2%에 그쳐 공공부문 비중이 크게 높아짐

연도별 통합 재정규모 및 경상GDP 변동 현황 (단위: 조원)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통합 재정규모 [A]	115.4	121.0	129.3	136.8	136.0	164.1	183.4
경상 GDP [B]	484.1	529.5	578.7	622.1	684.3	721.3	781.2
비율 [A / B]	23.8%	22.9%	22.3%	22.0%	19.9%	22.8%	23.5%

주) 1998년~2004년까지 통합 재정규모는 결산 기준이며, 2005년은 추경예산 기준임

□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규모의 대형국책사업이 계획되고 실행 예정

정부 발표 대형 국책사업의 사업예산 및 국고지원 예정규모

사업명	사업예산	국고지원	비고
자주국방	209조원	209조원	-
미군부대(용산기지)이전	3.6~6조원	3.6~6조원	-
농업농촌특별대책	119조원	119조원	-
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16조원	-	-
동북아물류중심 로드맵	약 30~40조원 (추정)	-	-
예) -인천공항 2단계 -부산신항 -광양항	4조7,032억원 5조6,899억원 4조3,882억원	2조3,516억원 3조3,204억원 1조8,161억원	-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확정	8.5조원	수도이전 비용 45.6(국고 11.3 조원) 보다 크 게 감소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63조원 (04년 현재 예산기준)	13조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115조원	88조원	-
전자정부 2단계 사업	2004년 960억원	2004년 960억원	-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과제	5조347억원	3조6,852억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차상위계층확대지원	2004년 829억원	2004년 829억원	-
신도시 최대 20개 건설	약 40조원으로 추정	-	-
문화비전·새 예술정책	15조원	-	-
합 계	600조원 이상	400조원 이상	-

□ 공무원 숫자의 급격한 증가

- 1.17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0개 부처에서 448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직제 개정안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
-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는 환경부 160명, 검찰청 101명, 통일부 34명,
건교부 18명, 산림청 44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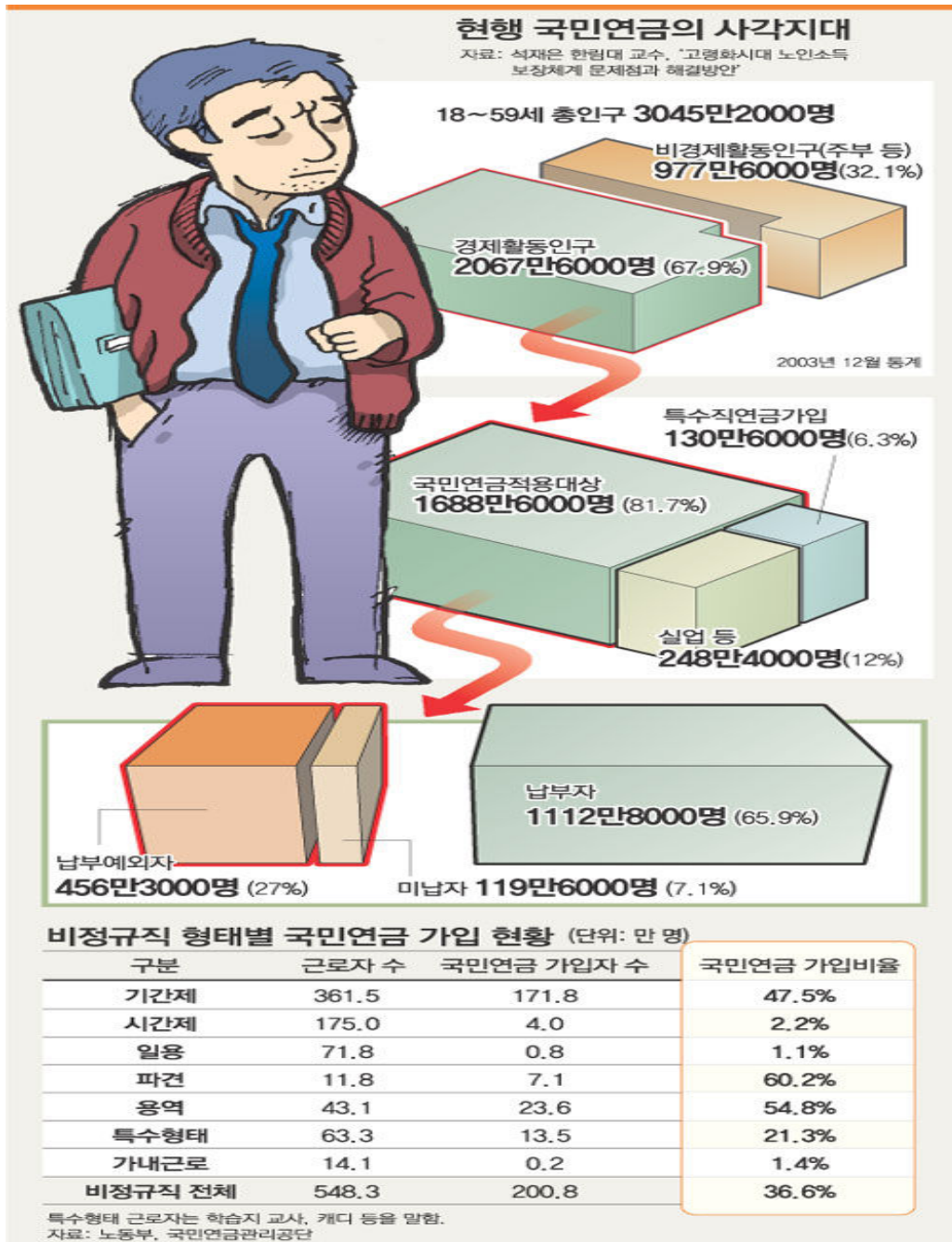
- 집권초기 ‘일 잘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명분은 퇴색된 채, 거꾸로 ‘비효율적인 큰 정부’로 가고 있음
- 현 정부 집권이후 2005년 7월말까지 2만2422명의 공무원이 증원되었고 이 중 5급 이상이 7.9% 증가하여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증가율(2.4%)의 3배가 넘었음
- 특히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은 106명에서 125명으로 무려 17.9% 증가

9. 연기금 부실화의 진행

□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 고조와 해결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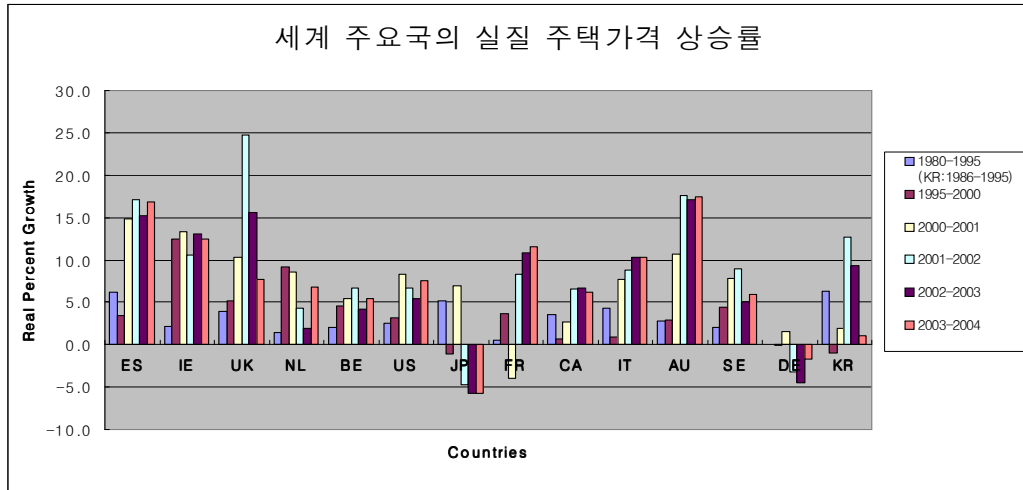
-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 자영업자의 불성실 소득 신고 및 미가입,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 미숙한 제도 운영 등이 겹쳐 ‘불만정책 1호’가 됨
- 2003년 6월 정부案이 나온 뒤에도 개혁만 외칠 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연금의 문제점



10. 지나친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정책

□ 2000년대 초반 4년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전 세계적인 추세였음



□ 국내에서는 더구나 일부 지역 일부 부동산에서만 관찰된 현상임

구분	전체		20평이하		21-30		31-40		41-50		50평초과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포함	제외	
서울	03.10월말	1155	999	1750	1136	899	830	1081	1001	1205	1163	1572	1560
	04.10월말	1131	1011	1565	1076	883	825	1081	1019	1244	1205	1695	1691
	(변동률)	-2.1%	1.2%	-11%	-5.3%	-1.8%	-0.5%	0.0%	1.8%	3.2%	3.7%	7.8%	8.4%
	05.5월중	1163	999	1550	743	907	835	1124	1040	1305	1259	1852	1848
(변동률)	2.9%	-1.2%	-0.9%	-31%	2.7%	1.2%	4.0%	2.1%	4.9%	4.4%	9.3%	9.3%	
강권	03.10월말	2081	1784	3127	2461	1664	1430	1742	1633	1863	1854	1896	1924
	04.10월말	1963	1760	2737	2245	1541	1336	1679	1613	1894	1887	2044	2084
	(변동률)	-5.7%	-1.3%	-13%	-8.8%	-7.4%	-6.6%	-3.6%	-1.2%	1.7%	1.8%	7.8%	8.3%
	05.5월중	2100	1722	2955	1169	1663	1364	1851	1695	2027	1997	2232	2269
(변동률)	6.9%	-2.1%	7.9%	-48%	8.0%	2.1%	10.2%	5.1%	7.0%	5.8%	9.2%	8.9%	
신도시	03.10월말	831		655		769		926		944		915	
	04.10월말	857		630		769		960		1013		1075	
	(변동률)	3.1%		-3.9%		0.0%		3.6%		7.3%		17.5%	
	05.5월중	903		614		765		1012		1154		1330	
(변동률)	5.3%		-2.6%		-0.5%		5.4%		13.9%		23.7%		

□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세금이라는 수단으로 풀어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최근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바, 가장 주요한 것은 건설업의 위축임. 현재 110%에 달하는 주택보급률이 약 130%정도까지 상승할 경우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임. 따라서 꾸준하게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공급확대이지 수요억제가 아님

□ 수요억제책이 장기적인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질 경우 이 정부가 끝나는 시점 혹은 새정부 출범시점에 엄청난 부동산 가격폭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 참여정부 집권시기 내에서만 상승을 억제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매우 문제가 있음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필요

11. 중국쇼크의 지속 가능성

□ 현재 중국은 경공업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중화학 공업에 기반을 둔 산업화를 적극 추진 중임

-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가전 공작기계 등의 분야가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산업인데 이들 산업은 모두 한국경제의 수출을 주도하는 수출주도산업임

□ 따라서 중국이 이들 산업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굳힐 경우 국내 수출품의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이러한 디플레이션은 한국경제의 수출채산성을 악화시키면서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농후함

□ 중국의 중화학 중심 산업화의 성공이 한국경제의 수출부분 경쟁력 약화와 경제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재앙적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Steven Roche (Morgan Stanley)의 중국발 디플레이션이론

□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급과잉문제가 향후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예상이므로 중국과의 격차벌리기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내부의 내전양상을 벌이면서 갈등이 증폭

12. 서비스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입초과 현상 심각

□ 교육 의료 관광 서비스업에서 엄청난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2005년 한해 해외유학, 골프여행, 광고, 의료서비스 등으로 해외에 흘러나간 돈이 17조원(170억 달러)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이는 국내 수요로 흡

수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을 1.8%p 가량 성장시킬 수 있는 수준

□ 산업자원부의 '서비스수지 및 여행·유학수지 동향'에 따르면 2005년 1~11월 내국인의 해외 유학 및 연수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 7조 3천억원(한국은행 집계)에다 비즈니스 서비스 적자 5조 2천억원, 골프 등 해외관광 적자 4조 1천억원 등을 합하면 해외지출 규모가 총 16조 6천억원(137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기러기아빠

- 한총련(한시적 총각들의 연합회)이 조직되고 독수리 기러기 펑귄회원이 있다는 우스개소리마저 회자되고 있음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명품교육이 공급되어 야 하는데 이러한 명품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데 따른 사회적 부담이 엄청나게 증가

□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소득상위 10%계층의 월 평균 교육비는 50만 8,000원으로 하위 10%의 10만 1,000원보다 5배나 더 많이 투자했고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보여주는 학원 및 개인 교습비 지출액은 각각 271,000원, 39,000원으로 그 차이가 6.9배에 달함 ⇒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을 줄어뜨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바, 소득이 적은 하위계층은 교육비, 특히 많은 사교육비 지출로 가계가 힘든 실정

- 소득 하위 20%계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8년 동안 소득증가는 23%에 그쳤지만

소비는 40%, 월평균 사교육비는 28,000원에서 55,000원으로 96%나 늘어 사교육비 증가가 소득과 다른 소비증가폭에 비해 급격히 커짐

-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2003년 총 사교육비는 13.6조원으로 2001년 11조원보다 23.6%(2.6조원) 증가

연도별 총 사교육비 변동 추이 (단위: 조원)

1994년	1998년	2001년	2003년	01년 대비 03년 증감
7.0	12.6	11.0	13.6	23.6% (2.6조원)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당 월평균 보충교육비의 경우, 2004년 13.7만원으로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45.7% 급증함

연도별 가구당 월평균 보충교육비 지출 규모 추이 (단위: 만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2년 대비 04년 증감
6.0	6.4	7.9	8.7	9.4	12.6	13.7	45.7%

(자료: 통계청)

- 국내에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산업의 육성을 소홀히 한 결과 엄청난 관광산업의 수입초과 현상이 나타남

III. 미래는 없는가!?

1. 국정운영철학의 획기적 변화 필요

- ‘국민’주택은 25.7평이하

□ 분열이 아닌 통합의 에너지를 가지고 집권의 동력을 삼아야 함

- 공동체 자유주의

2. 무너진 성장동력의 재가동

□ 기업인 천하지대본(企業人 天下之大本)의 정신으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 金·産 분리원칙 등 도그마로 굳어진 명제들에 대한 재검토 및 도그마로부터의 해방

□ 다양한 형태의 지배구조가 가능하고 각각의 지배구조가 경쟁하는 모형 만들기

3. 서비스산업의 본격적 육성

□ 명품교육, 명품의료, 명품관광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내에서 명품과 일반품을 모두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기타 금융·회계·법률 등 서비스산업 전문가의 본격적 육성

4. 공적 영역의 손질을 통한 사적영역의 확대 작업(국가주의의 퇴진)

□ 공적 영역의 횡포로부터 사적영역을 구해내는 작업

□ 정부 실패, 공적 영역의 지나친 확대가 가져온 부작용을 재검토하고 사적영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재구축하는 작업

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자부심 고양

- 세계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산업화 성공의 자랑스런 역사 부각시키기

-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386 운동권이 남긴 부정적 지적 유산에 대한 대청소 작업 필요

김정일 독재정권 살찌우는 노무현 정권

김태산(자유북한방송 기자)

대한민국에 현 정권이 선 때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땅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3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남한으로 오게 된 것은 내 나름대로의 신념에 의해서 였지만 그러나 지난 기간 남한의 경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 그에 따르는 상승된 국제적 이미지의 힘도 적지 않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남한에서의 생활은 자신의 남한행에 대한 실망과 앞으로의 길 선택을 위한 모대김의 연장이었습니다. 물론 저를 받아주고 혜택을 준 국민여러분과 대한민국의 법에는 감사합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야 2000년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수억 달러를 김정일에게 바쳤다는 것을 알았고 그로 인하여 북한 인민들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지금까지 연장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였습니다.

1996년 이후 원료와 자재의 심한 부족으로 인하여 100% 멎어있던 군수공장들이 김대중이 왔다 가면서부터 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김대중이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바탕을 다져 준 셈입니다.

저는 2002년말 남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날이 갈수록 정말 실망이였고 그런 부실하고 야심가인 대통령을 다시 뽑은 남한 인민들에 대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 대통령은 철저히 김정일과 똑 같은 경제 무식쟁이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 야심가이며, 김대중과 김정일의 각본에 의해 정권의 자리에 올라왔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지난 3년간 남한의 경제는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는 식이었을 뿐이었지 그 어떤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의 발전은 대통령의 말뿐이었고 국민들의 생활은 여전히 하강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올바른 경제로선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자연 발생적 조건에만 맡겨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는 민중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척 해야 하겠으니까 미래는 보지 않고 겨우 생각한 것이 지나간 <역사에 대한 재평가>라는 명목하에 지난 기간 자신의 피타는 노력으로 빈궁에서 허덕이던 나라를 일떠세우고 국민들과 세계의 신망을 얻었던 선배들의 허물을 들추어서 헐뜯고 깎아내리는 비열하고도 너절한 짓부터 서슴없이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정치 야심가들만이 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는 애국자가 매국노로 되고 매국노가 애국자로 부상하는 정치협잡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결과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숨어서 쓸라닥거리던 붉은 쥐새끼들이 살판치는 땅으로 변했고 결국은 나라를 지키던 국가보안법이라는 고양이의 발톱은 무디여지고 경제라는 나라의 창고는 밑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나라의 경제는 곧 국력이고 정치적 승리의 담보입니다. 지금 몇 개 안되는 대기업에 의해 유지되는 경제 숫자로써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미래를 절대로

담보할 수 없습니다. 원료, 동력 등 에너지 자원이 심히 부족한 이 땅에서 현 정부와 같이 경제에 무식하고, 무관심하다면 10년 내에 이 나라는 후진국 대열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문맹자이며 나라의 앞날을 생각지 않는 정치야심가들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보았지만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이 나라 현 정권처럼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무시하는 정부는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서도 “우리 개성공단에서 나오는 상품이나 좀 팔아 달라”라는 식의 비참한 경제외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경제 외교가 아니라 정치적 사기입니다.

현 대통령은 다음으로 국민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을 눈가림하기 위하여 겨우 생각한 것이 임기간에 아빠트값을 잡는다는 것이였습니다. 현 대통령이 무슨 변호사 출신이라더니 겨우 생각하는 것이 변호사다운 생각에서 더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기관차를 끌고 가는 대통령이 이런 노릇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으로써 응당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잡고 정치를 바로 한다면 국록을 타먹으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응당 찾아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자신이 법을 무시하고 법우에 올라서서 난동을 부리니 결국 나라의 법은 대통령의 발가락으로 전락되고 나라는 반역자가 애국자를 심판하고 수감자가 경찰을 사살하는 무법천지의 나라로 변해 버렸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었지만 집값은 고사하고 오히려 건설부문에서의 극심한 침체만을 안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을 줄이겠다던

국민들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경제발전의 하락으로부터 생기는 자금 부족난을 서민들로부터 각종 세금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5년이라는 임기 간에 공금을 물쓰듯하면서 부인을 이끌고 외국 여행 다닌 것과 얼굴 수술을 한 것밖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무능한 대통령이였다고 낙인이 찍히는 것은 노무현 한 인간에 대한 평가로 그치겠지만, 그러나 그가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끼친 후과는 막대하며 수십년을 가도 시정하기 어려운 국가와 민족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 정권의 문제는 간단히 이만하고 자신이 북에서 온 사람인만큼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허점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보기에 지금 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1개 국가로서의 그 무슨 정책이라기보다는 미친 놈이 무서우니까 때려잡든가 아니면 병을 고쳐줄 생각보다는 비굴하게도 그들에게 무엇을 던져줌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 기간이나 연장하고 안녕이나 유지해볼까 하는 데서 출발한 비굴한 자의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머저리 같은 부잣집 자식이 힘세고 무서워 보이는 아이에게 비굴한 웃음을 웃으며 자기를 봐줄까 하고 떡썩이나 사탕알을 가져다 바치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머저리 같은 부잣집 자식 치고는 정말로 머저리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나 가져다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무더기로 가져다 바치니 정말로 망할 짓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저들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를 만드는데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둘째로,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현 남한정부가 북한독재정권의 체제연장을 도와주는 저들의 죄상을 숨기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끌려 다니는 저들의 어리석음을 가리기 위한 위장물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시절부터 남한정부는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같은 민족을 돕는 일이라고 선전은 해오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강도가 무서워서 그냥 가져다 바치는 것이고 비굴하게 빼앗기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북한의 굶주리는 인민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북한 독재자의 정권유지를 도와주면서 남한 민중에게는 햇볕정책으로 북한 인민들을 살린다고 저들의 죄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북한 정부는 남한의 지원물자와 자금을 가져다가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는 1%도 쓰지않고 있으며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도당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와 인민을 보위한다”는 구실을 내걸고 100% 군수생산과 군사력 강화에 쳐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온 탈북자들 치고 남한에서 보낸 옥백미를 먹어본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민군대가 1년에 45만톤 가량의 식량을 소비하는데 남한이 지원한 옥백미는 모두 군사용과 간부용으로 돌리고 평양시민들에게만은 동남아에서 밥을 먹어도 힘을 못쓰는 긴 쌀(안남미) 사다가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지방 주민들에게는 그나마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는 현재 노후됐거나 낙후하기는 하지만 모든 경공업 및 식료생산 라인이 적지 않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경공업 부문에 원료자재와 동력만 넣어준다면 북한 인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들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공업 및 식료품 원료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북한에서는 외화의 부족으로 공장의 80% 이상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북한은 경공업부문에 1년에 1억 달러만 투자하면 충분할 정도로 경공업공장들을 돌릴 수 있고 따라서 인민들의 생활도 유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기간 남한정부가 북한에 준 돈만도 수조원에 달한다고 하지만 김정일 독재정권은 한푼도 인민생활에 돌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경공업상품의 85% 이상이 중국의 싸구려 상품들이거나 일본과 남한의 중고 상품들이나 형편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공업부문에 돌리고 있는 공장은 피복임가공 수출공장을 제외하고는 신발 생산공장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라도 남한의 정부가 의류업체들의 북한과의 거래만 끊도록 지시한다면 당장 신발공장의 문을 닫을 형편입니다.

북한의 큰 피복임가공 수출회사인 은하무역지도국이 한 달에 한국의 의류 업체들과 의류가공수출 거래액이 거의 50~60만 달러 수준에 도달합니다. 북한은 이 돈으로 전문 신발생산용 원료 자재만 사다가 조금씩 신발을 생산 공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남한의 지원이 북한의 인민들에게는 조금도 가닿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남한 정부가 무엇을 언제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북한정부가 그것이 알려질까 봐 철저히 봉쇄하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의 신세를 진 것도 없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란 조금도 없으며 오히려 남조선 놈들이 계속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산다고 증오심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남한의 정부는 모르지 않으면서도 남한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마치

도 자신들이 햇볕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의 생각이 변해 가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교회기관들이 준돈은 물론이고 현대가 진행하는 금강산 관광도 북한의 무력부가 주도하며 거기서 생기는 돈은 모두 군사에 지출된다는 것을 남한의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북한에 달러를 주기 위한 수법외에 다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는 얻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외화는 한푼도 손에 쥐여보지도 못하고 빼앗기며 그 외화는 인민생활 향상이 아니라 독재자의 체제 연장에 이용될 뿐입니다.

북한정부는 자기 인민들에게 “남조선 괴뢰들이 햇볕정책이라는 걸 써서 우리 북조선을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따가운 햇볕아래 돌에다 올려놓아 말리우는 것처럼 말려 죽이려 하니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교양 선전하는 형편인데, 어리석은 현 남한정부와 그에 추종하는 세력들은 자기네가 퍼주었으니 북한사람들도 동부독일 사람들처럼 자신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들의 정신세계가 변할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김대중 때부터 현 정부가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주적 관념이 변하고 총을 잡은 군인들의 정신세계가 마비되어 언제 이 나라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수중에 들어갈지 모를 형편에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현 정부와 일부 사람들이 김대중과 같은 역적을 가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남한의 무력이 강하거나 같은 민족끼리여서가 아니라 미군이 이 땅에 있고 한미군사동맹이 살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북한을 잘 압니다. 남한의 일부 국방부문 박사나 교수들은 남과 북의 군사 부문 장비들의 대비 숫자나 적어놓고 허장성세하며 “먹지 못해 굶주린 북한군은 채래식 무장을 가지고 절대로 남한과 전쟁을 해서 대상도 안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적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너무나 안일·해이해져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서 무장장비는 인간들이 이용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 전쟁은 인간들의 사상이 결정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전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꿈속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남한의 무력이나 경제력을 두고 우쭐대는 그들이 앞으로 자기들을 향해 총을 쏠 수 있는 무서운 적이 북한땅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대열 안에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미군만 철수한다면 이 남한땅에 전쟁을 하지 않고도 공산정권을 세울 수 있는 거대한 주력이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것과 지금 자기들이 북한에 퍼주는 돈으로 그들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돈을 주고 맹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오직 이 한반도에 불행의 화근만 더욱 자라울 뿐입니다. 어떤 답답한 사람들은 북에 지원을 안주면 그들이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지원을 안주면 전쟁을 할 힘도 지난 기간에는 없었고 특히 전쟁을 할 그 어떤 국제적 국내적인 명분도 없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북한을 잘 알지도 못하며 잘난체하는 이런 남한의 겁쟁이들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셋째로, 남한정부의 잘못된 대북 지원은 북한 인민들에게 있어서 고통의 연장이며 따라서 남한정부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대북 지원은 김정일의 배만 불리고 그의 1인 독재체제만 뒷받침 해 주는 반민족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김정일의 독재가 연장되는 만큼 북한 인민들에게는 배고픈 고통과 무권리의 연장일 뿐입니다.

1990년대말 2000년대초에 남한의 재정적·물질적 지원만 없었다면 김정일은 지금과 같은 선군정치라는 군사독재의 터전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며 따라서 개방으로 가든가 그 어떤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북한 인민들이 김정일 정권을 부정하고 있을 때 김대중 정부가 지원을 주고 구걸 행각을 벌임으로써 북한에서는 “보라. 드디어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 앞에 무릎을 꿇은 원수들은 경제봉쇄를 풀고 잘못을 빌며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오직 장군님만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만세!”라는 선전공세를 강하게 벌였습니다.

그런 선전활동과 함께 김정일은 자기 정권의 위협을 느끼고 군대를 꺼안는 사업부터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개혁·개방이 아니라 남한정부를 호령하여 해마다 수많은 자금과 식량, 비료 등을 끌어들이며 군사를 강화하고 국민들 속에 자기의 이미지를 굳히고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로 जु달음쳤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현 정부는 혹시나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할 것이라고, 북한은 생각지도 않는 노릇을 혼자 점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약간 커져가는 북한의 장마당을 지켜보고는 때이른 만세를 불렀습니다.

옛 소련이나 중국도 그랬던 것처럼 1인 독재자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개혁·개방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공산주의 야심가들의 심보를 절대로 모르고 있으며 아직도 어리석게 김정일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남한 정부의 어리석은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남한이 북에 식량과 비료를 안준다면 그들은 모두 굶어죽지 않기 위해 서라도 할 수 없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길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지금처럼 농사를 짓는다면 절반이상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형편에 처하게 되며 인민들은 살기 위하여 그 어떤 투쟁을 하든가 아니면 더 많은 탈북자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서 누가 과연 그 정부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전쟁에 뛰여 들겠습니까?

남한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는 데 식량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남한의 쌀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살찌우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입니까?

북한을 너무도 모르는 무식쟁이 주제에 저들만 인간성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정말로 식량을 주겠으면 인민들이 먹을 수 있는 옥수수를 주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옥수수나 옥수수 가루로 주면 김정일과 간부들이 먹기 싫어서라도 인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옥수수로 준대도 아마 그것으로 군수용 알콜을 뽑아 화약 세척용으로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한정부가 무엇인가 바라고 그렇게도 성의껏 퍼주었지만 집단 아사가 생기던 1995년 말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김정일은 자기 인민을 위하여 아무 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정일은 오직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땅을 깔고 앉아 공산화를 실시한 후에 자기 자식에게 자리를 넘겨주겠다는 속심밖에 없으며 그 야심은 그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정일이 영원히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데 남한정부는 언제까지 비료와 식량 자금을 계속 공짜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은 안중에도 없이 임기 동안 김대중 前 대통령과 북한 독재자의 장단에 따라 눈치나 보면서 춤이나 추겠다는 것입니까?

넷째로, 대북 지원에서의 허점은 정부가 머저리 짓을 하니 별의별 정치 사기꾼들이 다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김정일에게 퍼다주는 너절한 아침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죽이는 행동을 한 댓가로 무엇인가 얻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지원을 하겠으면 정부의 주도하에 지원의 량과 시기를 호상 이익에 맞게 조절해가면서 지원의 의의도 있고 빛도 나게 한마디로 성과가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무법천지라 해도 이처럼 바보 정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사람들이 남한에는 모두 바보들만 사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김정일도 남한정부를 한개 나라의 정부로 보지 않고 제마음대로 비웃으며 손바닥우에 올려놓고 놀리는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독재자에게 무엇이 그리도 끌리어 돈보따리를 들고 그것도 설설기여 들어가는지 이해도 안되며 굶주림에 허덕이고, 끝만 번지르르한 북한 사람들 앞에서는 왜 그렇게 할 말도 못하고 자신의 인간 존엄마저도 지키지 못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시도라고 하는 이 나라의 일부 종교 우두머리들도 보십시오. 생활에 쪼들리는 국민들이 그래도 무엇인가 희망을 바라고 한푼 한푼 모아 바친 돈을 어찌하여 종교가 제일 반대하는 개인우상 김정일에게 대남 간첩자금으로 모두 가져다 바치고는 그들의 선전 이용물로 변화하여 이 땅에 내려와서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뉘척대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하느님 앞에 바친 돈이 개인독재자에게 바쳐져야 하며 그런 종교인들은 이 나라 법 밖에서 사는 인간들입니까? 그들이 바친 돈이 폭탄으로 변하여 이 나라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간첩자금으로 이용되는데 이 나라의 법과 정치인들은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그래 이 남한땅에 공산사회를 세워 달라고 자신들의 피와 땀을 한푼 한푼 모아서 성금과 세금을 바쳤습니까? 대북지원을 하더라도 규정과 질서를 세우고 정부가 유일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대북 지원 즉 식량 지원을 북한의 인권과 결부시키는 것은 정치문맹자들이 하는 소리거나 김대중 前 대통령과 그에 동조하는 역적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하는 허튼 소리입니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민들에게 정치와 신앙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에서의 정치성을 띤 문제이지 절대로 먹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부잣집에서 굶지 않고 잘 먹는 개를 주인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짐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그 개를 때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잡아먹거나 또 주인 마음대로 팔아 버릴 수도 있고 잡아 가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가 배불리 먹는다고 하여도 모든 면에서 자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도 개와 같이 먹을 것만 조금 주면 개처럼 주인이라는 김정일에게 정치적 및 신앙적 자유를 다 빼앗기고 아무런 경제활동의 자유도, 마음대로 말하고 글을 쓸 수가 없어도 그들의 인간으로써의 자유와 권리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아야 옳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남한의 김대중이나 그의 졸개들은 북한의 김정일만 사람으로 보고 북한의 인민들은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개로 취급을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북한에 식량이 없어서 정치범수용소가 1950년대부터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소·성명도 없이 총살당하고 맞아죽고 쫓겨났습니까? 북한의 인권유린은 철저히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생긴 것이며, 지금에와서 생긴 것이 아니라 1945년 해방이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그날부터 생긴 것입니다.

1945년 이후 북한의 유명한 민주당의 당수였던 조만식 선생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정치적 자유를 위협당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지하감방에서 사살되었습니까? 그래도 과연 북한에 식량만 주면 북한 인권문제를 도운 것이고 그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만일 북한인민들에게 진정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있었다면 그들은 지난 대량아사 때에 300만명이 아니라 단 300명도 굶어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도 주인이 가난하여 먹을 것도 못주고 도망칠까봐 무서워서 쇠사슬로 비껴어 매여 둔다면 몇일만에 굶어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개를 묶어놓지만 앓는다면 그 개는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아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유로운 먹이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절대로 굶어죽지 않습니다.

북한정부가 대량아사 때라도 사전에 국가창고가 비었다는 것을 알리고 북한인민들에게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문을 대담하게 믿고 열어주고, 인간들의 적성과 능력에 따르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주었다면 그들이 왜 앓아서 굶어 죽었겠습니까?

한마디로 위에서 말한 가난한 집의 개와 같이 인간들의 정치·경제적 자유를 보이지 않는 쇠사슬로 뚝뚝 묶어놓았기 때문에 꼼짝못하고 앓아서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정일은 인민들앞에 사죄 한마디 안하고 그 죄를 전 농업담당비서 서관희와 같은 사람들에게 넘겨썩워 대중 앞에서 공개 총살해버

렸으며 그나마도 살기 위하여 중국으로 나간 사람들까지도 혈안이 되어 잡아
들여서는 민족반역자로 몰아 죽이거나 수용소에 쓸어 넣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 남한이 쌀을 얼마나 주면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정치 경제적 자유를 완
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남한이 쌀을 주어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없앤 것이 있습니까?

철저히 북한 지원과 북한 인권문제는 서로 상반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철저
히 남한정부는 북한에 지원을 주면서 큰집답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꼬집어 말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 시끄러워서 남쪽의 지원을
안받겠다고 말하든지 아니면 남쪽의 말을 받아들이든지 하게 될 것이고, 이것
이 지원을 주는 자의 도리이고 對북 외교의 승리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盧정권의 교육정책, 문제 많다!

두영택(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

1. 우리 교육의 현실

우리 교육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교육이 튼실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 문맹률이 80%를 넘던 대한민국이 짧은 시간에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그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희망 실종의 불길한 예감으로, 갈등의 진원지로 우리에게 다가 오고 있습니다.

황폐화되고 있는 공교육,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 교사에 대한 권위는 사라지고 난장판과 다름없이 변해버린 교실, 늘어나는 기러기 아빠와 교육이민, 갖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과 갈등이 여기저기서 충돌합니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지식과 소양, 예의범절이나 문화 시민으로서의 질서의식 등 꼭 필요한 교육은 시키지도 못한 채, 참교육이란 이름으로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재의 교육 현실입니다.

우리 교육이 질곡의 나락으로 빠져 드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라고 봅니다. 그 첫번째가 사학법 개정 및 3不 정책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이고,

두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反하는 이념의 단편들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일들을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전교조 때문입니다.

2.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

가. 사학법 관련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수도이전법 제정에 이어 국회가 또다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반하는 입법 행위로 노무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본질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교육의 공공성 운운하며 여당이 주도한 개정 사학법은 사학의 사유재산권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악법입니다.

또한 ‘전교조 공포증’이라는 말이 학교 안팎에서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현실에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결과적으로 집단이기주의와 이념적 편향을 보여준 전교조의 전횡과 과도한 학교운영 개입을 불러올 게 뻔합니다.

결국 사학법 개정안은 모든 사학을 사실상의 공립학교로 만들어 법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학비리 척결 문제도 다른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합니다.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에 청와대가 비리사학을 감사, 사정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을 보면 이를 입증하고도 남겠습니다. 이 같은 말은 비리사학을 단죄하는 데 있어, 사학법 개정 말고도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고, 두번째로 정부가 사학비리에 대한 단죄 의지가 있었다면 그동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감사, 사정 시스템을 통해 얼마든지

지 비리를 단속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사학들이 반발하니까, 다분히 보복적 성격의 감사와 사정을 한다니, 설사 이 사정과 감사가 당장 먹히더라도 그 후유증은 상당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표적, 보복적 성격의 비리 사정에 승복하려 들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뒤흔든 입법행위이자, 반시장적인 교육 개악, 그리고 교육을 좌파들이 장악하려는 음모로 규정합니다.

나. 3不 정책

이른바 참여정책의 3不 정책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 본고사는 과외를 성행시켜 공교육을 붕괴시킴과 아울러 사교육비 증가로 국민경제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본고사는 금지하되 대학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기 위해 논술고사까지는 허용하고 있으나 필답고사는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교등급제는 고등학교 교육기회의 평등화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고교평준화는 고교등급제의 반대 개념으로서 정부에서는 자유경쟁보다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고교평준화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기여입학제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대학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

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기여입학제가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일부 사립대의 입장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회균등과 사회정의를 해칠 수 있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입학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를 막고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킨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대학은 자유로운 학생선발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 자율에 의한 특성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학 본고사는 대학이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기여입학제도 허용해야 합니다. 대학교 입학은 자유롭고 졸업을 어렵게 해놓으면 되는 사안입니다. 기여입학금이 대학발전기금으로 쓰여 진다면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도 좀 더 나아질 것입니다. 또한 기여입학금은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혜택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니 굳이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한나라당이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고교평준화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사실 평준화 제도는 1970년대의 '유신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제도였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무지막지한 제도였습니다. 근대화 과제 아래 수많은 산업 인력이 필요하던 당시의 시대상황으로는 의무교육 확대와 정부의 교육 통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경제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 비할 바 없이 커진 오늘에 있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970년대에 필요했던 정책을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하려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수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교육은 평준화 과정이 아니라 냉정한 차별화 과정이어야 합니다. 능력에 맞는 학교에 가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이 21세기에 부합하는 교육정책입니다. 호랑이가 사막에서는 힘을 쓸 수 없고 낙타가 산에서는 힘을 못쓰는 이치와 같습니다. 획일적 평준화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로막는 제도일 따름입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선발권을 박탈하는 것은 강력한 독재체제하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국가가 정상상태로 돌아 왔다면 당연히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돌려주어야 교육이 살고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교평준화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다. 자립형 사립고

30년이 넘게 유지되어온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립형 사립고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당국이 전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강북뉴타운에 서울시가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교육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앞서 이를 보완할 자립형 사립고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원단체연합회가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시·도 교육청 관계자, 사학법인 관계자 등 1,6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5.5%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찬성을 표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사항입니다.

라. 기타 문제

문제많은 교육부에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정책은 수준별

이동수업과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교조의 반대에 부딪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원평가제와 학생의 기본 특성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뜻이 담긴 수준별 이동수업을 교육부는 전교조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전교조 문제

우리 교육계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이유 중의 가장 커다란 요인은 바로 전교조 때문일 것입니다. 전교조는 정부가 교육개혁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강력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교육정책에 자신의 이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처럼 전교조가 정부와의 투쟁에서 내건 명분은 ‘참교육’과 ‘공교육’입니다. 그들은 ‘참교육’과 ‘공교육’을 독재정권, 부정부패 집단, 교육의 정치예속화, 기득권층, 反통일론자, 친미주의자와 대비시키면서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 시킵니다. 그들의 ‘참교육’, ‘공교육’에 반대하면 독재정권 지지자, 부정부패 집단, 기득권층, 反통일론자, 친미주의자로 내몰립니다.

전교조는 정부와의 투쟁을 단결력 강화와 자신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이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에다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 사무국장 출신을 등용한 것을 보면 사실상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와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교육주권론을 앞세운 전교조의 공격에 정부는 교육개혁이라는 것으로 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와 전교조와의 표면적 갈등은 교육생산자 사이의 갈등입니다. 정부와 전교조는 교육 생산자라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교육 주도권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사이의 주도권 싸움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소비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일관되게 전체주의적, 간섭주의적, 온정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에서 이들이 첨예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결국 교육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전교조는 교육권을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주도의 자율이나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주적 참여가 아니라 교육소비자의 책임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4. 결 론

노무현 정권은 저소득층을 빈곤에서 탈피하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책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교육 정책에 집착함으로써 사교육비만 증가시키고,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의 분배정책이 빈곤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빈곤의 세습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원칙은 선택권과 선발권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는 것이 시대 변화에 맞습니다.

단군 이래 가장 번영을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이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입니다.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서민 죽이는 참여정부

김효선(주부)

약이 올라 경제성장률 7% 공약을 했다는 노대통령의 껍판정치로 서민경제가 파탄나고 국민부담금은 매년 늘어 사상 최대치를 更新하여 금년에는 495만원에 달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국가채무는 2005년 국민 1인당 평균 514만원, 금년에는 577만원으로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과 국민 부담금이 매년 늘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은 낮은 편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을 감안할 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소득과 경제수준 등을 감안하면 조세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이 결코 낮지 않으며, 1982~2002년의 26개 OECD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해 산출한 국제조세비교지수 연구에서도 적정수준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자료와 한양대 나성린·이영 교수도 우리나라 부담률 수준이 적정 수준보다 대체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 부담금은 2000년에 비해 37.2% 증가했으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같은 기간 32.2% 늘었습니다. 소득 증가율보다 준조세 성격의 국민 부담금 증가율이 훌쩍 앞지르니 당연히 서민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오늘을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서민에게 국민 부담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노후보장 대책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를 위협하는 흉기입니다. 2004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생활비를 압류당한 가정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다 심각한 경기 불황으로 빚만 늘어났고 국민연금 채납액도 200여만원으로 불어나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유일하게 남은 생활비인 일식집 카드매출금 130여만원마저 압류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 죽이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희망연금이 아니라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자살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무서워 돈 없는 서민들 대한민국에서 살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한 서민들에게 매월 공제하는 국민연금은 생계를 위협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니 차제에 의무가입제를 폐지하고 임의가입제를 도입하여 생활고에 신음하는 서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줘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마치 생일날 잘 먹자고 사흘을 굶었더니 죽더라는 어른들의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당장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 내일 맛난 것 줄테니 그치라고 하면 울음을 멈춥니까. 배가 고파 우는 아이에게는 얼른 젖을 물려 배를 부르게 해줘야 울음을 그칩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모르고 있나 봅니다. 서민들은 당장 각종 세금과 국민 부담금에 짓눌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증세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없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서민들이야 죽어나거나 말거나 노무현 정부는 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북한에 맘껏 퍼주고,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의 논공행상에 혈세를 퍼붓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한 경제문제는 걱정말라고 장담을 했지만 세계경제가 고도성장 탄탄대로를 치닫는데 유독 대한민국 경제만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2월 15일자 조선일보에는 노무현 정부 들어 성장·분배가 동반 악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져 1980년대 이후 평균치를 밑돈 것은 역대 정권 중 현 정부가 유일하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공연히 서민들이 못살겠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통계치가 노무현 정부의 경제失政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 서민들은

훨씬 살기 좋았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겠습니까?

쓸데없는 과거사 타령과 반기업정서를 부추기는 노무현 정권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조차 민노총 등 강성노조 등살에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기업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줄줄이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행렬로 중국·베트남 등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기업 때리기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기업들이 문을 닫아 실직·부도·파산 등으로 장기화된 실업상태가 지속되어 빈민층이 크게 증가하고 세수가 격감하자 늘어나는 건 봉급자의 유리지갑을 노리는 세금이요 죽어나는 건 서민입니다.

지난 해 부산에서는 화물트레일러 운전자가 치솟는 경유값 때문에 생계비조차 못 벌게 되자 이를 비판하여 분신자살을 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민 생계가 달려 있는 용달차·트럭·특수차량에 사용하는 경유값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4배나 올린 탓이었습니다.

우리 이웃에 월 2-3만원 전기료를 못 내서 한전이 전기를 끊어 촛불을 켜고 사는 가구만도 48만 가구에 이르고, 경기 광주에서는 어린 여중생이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고 공부를 하다가 잠든 사이에 불이 나 타죽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아프리카·중남미 저개발국 얘기가 아니라 서민을 위한 참여정부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재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국민 부담금이 늘어난 만큼 사회복지가 개선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빈민층이 550만 명으로 늘어나고 300만의 신용불량자에, 한 해 자살자가 6만 3천명이 넘어 37분에 한명꼴로 실직 등 염세 비판 자살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380만명 중 약 42%인 1,000만명이 하루 세끼 제대로 먹는 서민이요, 약 23%인 550만명이 세끼 입에 풀칠하기도 힘겨운 빈민입니다. 노대통령의 갱판정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채워 놓은 밥통을 노정권대에 와서 완전히 박살내 생산과 소비가 동반 자살을 하고 경기가 죽은 지 오래여서 회생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실직자와 청년실업자들이 자살로 내몰려 자살왕국이 돼 버린 것입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연초부터 각종 생필품과 대학 교육비, 교통요금, 유가,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과 각종 보험료 인상 등 서민들의 가계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물가가 줄줄이 오르거나 오르려고 대기중입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 수업료와 공·사립학교 수업료도 각각 평균 2.9%, 3.0% 인상돼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상반기 6% 인상안을 놓고 협의 중이며, 수도권 신도시의 지역난방요금이 14.86%나 오른다는 소식과 이에 더해 연초 집값·전세값까지 불안정하니, 서민 가운데에는 요트타고 샥스핀 요리에 불란서 산 고급 샴페인 즐기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서민도 있고 불이 나도 골프, 수재가 나도 골프, 골프에 미친 이해찬 총리와 같은 불량서민(?)도 있기는 합나다만, 불량서민을 제외한 힘없는 일반 서민 가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가계부를 쓸래야 매년 늘어나는 가계적자에 가계부 쓰기를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가계부에서 저축 항목이 사라진 지도 오래전 이야기이며 장보러 가기가 겁이 나 장보기 기피현상까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날 차례상에 올릴 음식은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 농산물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없이 수입 농산물로 차례상을 차립니다. 배 하나에도 오천원 만원이요, 도라지·고사리 등 채수 용품의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들었다 놓았다 망설이기를 수차례 한 끝에 결국은 값이 싼 수입 농산물을 집어 듭니다. 조상님들께 면목 없는 일인 줄 알지만 아이들 학원비와

계속 오르는 각종 공과금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보기에 나서는 주부의 마음은 가볍지도 기쁘지도 않은 고행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정부 3년 우리 서민들의 모습입니다.

노대통령과 이총리 같은 가짜배기 불량서민 말고 세금에 잡부금, 교육비에 짓눌려 나오느니 한숨이요 느느니 주름살뿐인 진짜 서민의 아픔을 누가 알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그 누가 씻어 주었습니까? 庶民이라는 罪로 실업에 울고 빛에 몰려 도산을 하고 폐업을 하여 식구들은 거리로 나 앉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생이별을 하게 된 게 누구 탓입니까?

바닷가 회집 150개 객석에 손님이라고는 10여명이 고작이고, 명절 때면 미어터지던 동해안 콘도도 40% 남짓 채운 등 만 등, 흥청거리던 부동산 중개업소도 80%가 사무실 유지비도 못 건져서 폐업이 속출하고, 사장님 소리 들던 영세 자영업자 227만 2,000여명이 월 소득 100만원도 못 올려서 빈민으로 추락을 하고 그 중에는 가출하여 노숙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거리에 나가 봤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경기불황이라 해도 연말이나 명절 무렵에는 거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는 연말인데도 거리에서 전혀 활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구세군 냄비와 시청 앞 누미나라에가 없었다면 연말인 줄도 모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고달파졌기 때문에 주위에 시선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3D 업종인 환경미화원 1명 모집에 대졸자 130여명이 몰려드는 기가 막히는 현실과, 간신히 붙잡은 직장이지만 삼팔선 사오정하며 정년단축이다, 명예퇴직이다 불안한 나날 속에 연봉제 노예문서에 묶여 이 눈치 저 눈치 살피느라 주눅들어 사는 월급쟁이에게 가계부담, 교육비 부담, 조기 유학, 해외연수 기러기 아빠 노릇도 서글픕니다. 먹을 것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며

어렵사리 대학 교육까지 시켰는데 꿈의 나라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환경미화원으로 나서야 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미의 미어터지는 마음, 쥐꼬리 봉급이나마 가족의 생계가 달린 직장으로 주눅들어 출근하는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바라보는 주부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월급쟁이가 무슨 죄요 유리지갑이 봉이라고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세수부족분 중 추가부분 충당을 위해서 소득세를 12.9%나 인상하고 집 한칸 땅 몇평 가진 사람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45.7%나 인상하여 허리를 휘게 하고 직장건강보험료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2.8배나 바가지를 씌워 없는 살림에 쪽박차기가 십상이니 유리지갑은 이래저래 고달픉니다.

결혼 15년 만에 겨우 마련한 집 한칸, 아들딸 출가 시키고 달랑 남아 있는 아파트 한 채에 보유세를 100%나 다락같이 올려 '자식 없는 게 상팔자'란 속담 대신 '집 없는 게 상팔자'라는 신종 속담을 만들어 낸 정부가 경유값도 10여년 만에 400%나 올려 마른 수건 쥐어짜듯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 등쳐먹기가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수도권에서만도 경기 성남·광주·안산 등 14개 지역주민들이 재산세 거부 운동에 나서고 시흥·오산·화성 주민들도 납세 거부해 나섰으며, 서울의 강남에서, 목동에서 재산세 인하를 부르짖는 국민들은, 이해찬 총리처럼 대부도에 땅 투기한 3%의 적대해야 할 땅부자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텃밭 한평 없는 97%의 짓밟힌 민초들입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통해 씹씹이를 최대한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한 말의 입김이 채 식기도 전에 재정경제부는 증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증세없이 양극화 재원을 조달하겠다”던 노무현의 말은 이미 증세방안을 확정 해놓고도 국민을 속인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통한 증세가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고 변명하지만 세금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는 증세에 해당되는 변칙적인 증세로 유리지갑으로 통하는 봉급자를 주로 귀어짜는 증세이니 서민 죽이기 증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거센 반발이 있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도 증세 정책 중 일부를 철회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 입안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서민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쥐꼬리만큼 남아있던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한 가정의 경제활동도 매월 벌어들이는 수입 내에서 지출계획을 세워 꾸려나갑니다. 4,900만을 책임지는 국가 경영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국가 경영의 수준은 한 가정의 경제활동만도 못하게 주먹구구식으로 경영되어 왔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세출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서민의 등골만 빼먹을 궁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정부를 믿고는 미래를 위한 가계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가계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에서 국민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결핍하면 세금인상 타령인지 국민이 노무현 정권의 봉입니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면 양극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도와줘야 할 서민을 대상으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건는, 서민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세금부담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한숨소리에 귀를 열고 국민들이 세금고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폭탄 정책을 거두어야 합니다.

당장 재정사정이 어려워 자연 증세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정부가 먼저 절약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 일상경비 5%만 줄여도 연간 5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느니 실직자요 빚더미인데 국민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노무현 집권 3년 만에 23개의 대통령위원회와 48개의 국무총리실위원회, 그것도 부족해 장관관 감투만 148개로 늘리고, 초등학생 일기장이나 뒤지고 간첩도 민주화 인사로 둔갑시키는 철밥통 국가공무원을 2만 3,000여명으로 대폭 늘려서 임금 초과 지급분만 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처럼 나라의 채무가 늘어난 것은 세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데 거꾸로 큰 정부를 지향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커지다 보니 씹씹이도 커지고 재정적자가 커져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도 부족하니 정부의 빚이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무분별한 대북 지원도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세금폭탄에 짓눌리게 합니다.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수도이전에 천문학적 혈세를 퍼붓는 것만 중지해도 서민들은 세금의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정마찰만 일으키는 청와대 및 총리실 산하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을 통, 폐합하고 낭비적인 국책사업 예산도 모두 삭감하며, 특히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구조조정과 지난해 8,564억 원이나 적자인 군인연금과, 7,333억원이 적자였던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혈세로 손실 보전한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과 공공부분의 개혁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 의하면 매년 양대 보험의 적자폭이 더욱 늘어 향후 10년간 46

조 3,000억원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렇듯 철밥통 공무원의 숫자만 기하급수로 늘려 서민들의 알뜰한 주머니를 털어 공무원들 배만 채워 주는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공무원이 존재하는지, 공무원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로 헛갈립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규제 완화, 反기업정서 해소, 노동의 유연성 확보, 작은 정부 구현 등을 통해 경제 활력을 증진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첩경입니다. 구멍가게 몇개 가지고 포장마차 몇채 가지고 국민경제를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화시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대기업이 국가경제의 견인차 노릇을 해야 함은 노무현 정권 말고는 4,900만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경제가 활력을 찾아 일자리가 늘고 장사가 잘되며 사업이 번창하여 소득이 늘면 세금은 저절로 많이 걷히게 됩니다. 정부는 경제가 잘 풀려 내수와 투자가 살아나도록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이 순서인데, 오히려 김대중 前대통령이 현대를 죽이고 대우를 날려 보낸 솜씨를 본받아 노대통령은 삼성을 죽이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政經유착이네, 부의 편중이네 벼라 별 잡소리를 다 토해내도 전체 수출고의 22%를 감당하고 GDP의 17%와 세수의 8%를 납부하는 초일류기업 삼성을 때려잡으면 100만 실업자가 우글대는 나라에서 삼성과 협력업체가 고용했던 120만 명이 갈 곳은 어디란 말입니까? 아무리 3류에도 못 미치는 등의 정부라 할지라도 그 정도 분간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서민은 죽어나거나 말거나 노무현 정부는 경제가 어때서라며 북한에 퍼주기만 하겠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무엇에 쫓겼는지, 무엇에 흘렸는지 서민의 고충과 서민의 아픔을 보살피고 어루만져야 할 ‘정부의 본분’을 내팽개치고 간·쓸개 다 빼놓고 핵무장 공갈단 김정일 돕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김정일에게 국제기구와 남한이 퍼준 돈은 총 33조원(33억 3,600만\$)이요, 그 중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에게 뇌물로 바친 5억 \$ 말고도 조공으로 바친 돈도 11조원이 넘는데다가 노대통령 집권 후 2년간 퍼준 것만도 4억 1,382만\$(5천억원)에 이릅니다.

노정권은 그도 부족해서인지 김정일에게 전기 200만kw를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려 25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चु고 배고픈 가난한 이 나라 주권자에게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멋대로 퍼주겠다니 어디 말이나 됩니까?

25조원이면 만원권 지폐로 4t 트럭에 실어서 매일 한대씩 2년간 실어 날라야 할 엄청난 돈이요, 국민 한가구당 250만원씩 빚을 져야하는 많은 돈입니다. 25조원으로 최신형 탱크를 산다면 5,000대를 살 수 있는 돈이며 전국의 대학생 273만명에게 1년 간 등록금을 대 줄 수 있는 그런 돈이요, 자본금 1억원짜리 작은 회사 25만개를 차려 200만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도 세금을 짓눌려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을 아예 씨를 말리려고 걱정하지 않고서야 가구당 250만원의 빚을 더 떠안기려 하니 죽으라는 것 아닌가요? 동포를 300만씩이나 굶겨 죽이는 살인폭압 독재자 김정일에게 피 같은 세금을 퍼붓지 말고 죽어가는 서민부터 살려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무분별한 대북 퍼주기를 중단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라고 주장하면 反통일 분자니 反민족주의자니, 친미 사대주의자니, 수구꼴통 냉전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국론 분열과 갈등, 대립만 조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과거사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원회 등에 지원되는 소요경비만 해도 78억원이나 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 민주화 운동을 하다 탄압을 받았다는 불순한 자들을 민주화운동가로 둔갑시켜 그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혈세의 지출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발전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며 갈등과 대립을 조성하고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결식아동의 숫자는 무려 30만 5,000여명에 이르고, 독거노인도 73만 5,0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빈곤층에 속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438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이들은 35만 8,000명, 이들 중 독거노인이 20만 6,000명입니다. 서민을 위한 참여정부라면서 오히려 결식아동과 극빈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의 숫자는 훨씬 늘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권이 들어섰는데 서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서민층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기현상이 참여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민의 정부이므로 당연히 서민의 삶이 윤택해 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서민층이 줄어들고 극빈층의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어지느러미에 삼페인 파티로 지새우며 태풍 ‘매미’가 와도 오페라 구경에 넋을 잃고 부부가 나란히 드러누워 눈꺼풀 수술에만 신경을 쓰는 ‘서민대통령 노무현’에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교육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안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맹모가 무색할 정도의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5~60년대만 해도 온 집안의 가산인 소 팔고 논 팔아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던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최고의 교육을 시키는 것을 부모로서 당연한 도리로 알고 최고의 보람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은 갈팡질팡 흔들리고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교육혁신위원회

를 통해 2·17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회·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교육복지예산 확충,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추진 등을 주요 교육 정책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이념 편향성이 짙은 교육현장에 무방비 상태로 내몰렸고, 평등주의를 내세우는 교육정책으로 인한 획일적인 교육으로 국제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가 불을 보듯 뻔한 봉어빵 찍어내듯 획일화된 평균인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각자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학력의 하향평준화와 공교육 황폐화를 입증한 고교평준화 제도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부의 教育失政으로 말미암아 침해당한 것입니다. 2.17 사교육 경감대책은 유명무실하여 공교육 황폐화로 인한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늘고 있으며, 열악한 국내 교육 현장을 탈출하기 위한 조기유학 붐을 일으켜 서민들마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해외유학 대열에 합류시키는 통에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습니다.

공교육의 황폐화는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았고 교육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켰으며, 백년대계인 교육을 정권 유지 내지는 재연장의 볼모로 잡은 정부와 여당의 불법적인 사립학교법 개악 추진과,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4.2%로 후퇴하여 우리 아이들이 난방비 부족으로 추위에 떨게 되었으며, 전기료가 없어서 컴퓨터 수업이나 실험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급식비 등 학생복지 축소, 교사연수의 축소 및 취소, 학교운영비 삭감, 학교시설 공사 및 신규사업 전면 중단 등 계속된 교육 失政으로 교육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피와 같은 세금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각 기관마다 과거사위원회니 친일진상규명위원회니 하여 갈등과 반목만을 양산하는 쓰잘데 없는 위원회에는 천문학적

혈세를 아낌없이 투자하며 미래의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결국 부모들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보다 높은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사교육 현장으로 보냅니다. 학교 교육만으로 우리 아이를 과연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공교육 현장을 떠나 학원으로,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황폐화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습득해야 할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 수 없자 학원은 당연히 다녀야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 사이의 학력 편차가 커지니 지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공교육의 황폐화는 학원을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학원 한 두 곳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낮에는 학교로 방과 후에는 학원으로 등 떠밀려 다니며 지식 습득에만 매달리니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 또한 부재입니다.

게다가 참교육을 표방하고 출범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득세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낸 부모들은 생각지 않았던 걱정거리로 속수무책으로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는 것이 불안해 졌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성장한 나라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교육시키는 학교를 믿고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한창 자라나는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거칠고 전투적인 용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나라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주입하여 자랑스러운 조국이 아니라 타도되어야 할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교육을 시키는 이념 교육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학교도 마음놓고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교육실정으로 말미암아 서민들은 이중으로 교육비를 부담하느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은 더욱 쪼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교육비를 댈 수 있는 학부모들은 형편이 나은 측에 듭니다. 남의 아이들에게 뒤질세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주부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심지어는 노래방의 도우미로, 파출부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획일적인 하향평준화 교육을 지향하며 아이들의 왕성한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커녕 좌편향된 이념교육에 치중하는 교육 당국과 정부의 교육정책은 서민을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며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금의 국내 정세는 가뜩이나 불안한 서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자랑스러운 조국이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둔갑하질 않나, 간첩 출신이 현역장성을 심문하지를 않나 도대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살면서 체득한 가치관이 180도 전도(顛倒)되고 있으니 힘없는 서민은 그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전직 대통령 김대중씨는 4월에 기차를 타고 방북한다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김대중씨의 방북은 남북연방제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세금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나 바로서기 위해서는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사사로이 주고받은 사문서인 <6.15 공동선언> 무효화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같은 평범한 주부들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헌법 개정 없이 헌법에 명시된 국체를 변경하는 행위는 반역행위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는 분명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 前대통령

의 <6.15 공동선언>에 언급된 통일방안과 노무현 정권의 통일방안은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통일방안입니다. 국민들은 김대중의 통일방안에 합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마치 남북연방제가 전 국민의 동의를 거친 것처럼 실행에 옮기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서민에게 국체가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장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으로 표출되어 모든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살아갈 나라의 국체가 변경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서가 이러한데도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보이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국민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반역세력과 일대 결전을 치를 각오를 새롭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갈가리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70년대에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이뤘던 눈부신 한강의 기적을 21세기의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재현하여 국민소득 2만\$대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함으로써 경제난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눈물을 씻어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盧정권은 정녕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꺾으려는가!

김경욱(경북대 4)

저는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며 또 앞으로 걱정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사말씀을 들으면서 한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빌리자면 “정부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19조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에서 모든 일을 주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집행하려면 ‘어디서 돈이 나올 것인가’라고 생각해봐도 역시나 세금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은 매년 한정이 되어있는데 어디서 새로운 정부 주도의 사업을 위한 돈이 나올 것인가? 그것은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번 돈을 모두다 세금으로 갖다 바쳐도 모자랄 판입니다. 요즘 아버지께서는 세금고지서를 보면서 한숨을 쉬십니다. 세금은 올라가는데 실물경기는 회복되지 않아서 수입은 동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며칠 전 <서울신문> 세계면에 스위스에 관한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슈비츠라는 칸톤은 한 세대 전만 해도 가난한 칸톤이었지만 감세 조치 덕분에 인구와 등록기업이 급증하면서 연방 산하 26개 칸톤 가운데 7번째의 ‘부자 칸톤’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단지 스위스뿐만 아닙니다. 무너지는 영국을 대처 수상은 과감한 감세정책과 규제철폐를 펼침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야한다고 합니다. 분명히 세금이 올라가면 다른 재화들이 저절로 동반 상승하게 될 것이고 제조물들은 원가의 상승으로 역시 가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세금도 많이 낸 상태에서 값이 오른 물건들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는 것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또 수입이 줄어드는 회사는 월급을 동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또 세금과 규제, 그리고 올라가는 인건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전자레인지 생산시설을 현재 완전 철거한 상태입니다. 중국업체들의 계속된 가격 인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높은 세율과 인건비로 가격경쟁력이 없는 공장을 철거해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원공장에서만 600명의 일자리가 사라졌으며 그 공장과 협력하던 업체의 일자리까지 포함한다면 어떨겠습니까?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공급해서 청년실업을 해소한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은 못할망정 이렇게 일자리를 없애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임금과 늘어나는 세금으로 마지못해 선택해야 하는 것은 가까운 중국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의 관리들은 아주 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공장이 들어오면 많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전략이 들어 있습니다. 즉 큰 자동차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은 따라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공단이 형성될 것이요, 일자리는 많이 창출될 것이며, 동시에 경제가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떨습니까? 나라에서 만들어주고 지원하여 만든 공업단지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있는 공장이라도 잘 돌아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생활가전의 경우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의 취업률은 줄어드는 반면 외국에서의 일자리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신년 연설에 대통령의 말처럼 임금은 동결하되 정년 연장을 약속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회사에 나가는 사람은 적는데 더 많이 뽑으라는 것은 세금도 낮춰주지도 않고 경기도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업보고 죽으라는 것입니까?

제조업에서는 공장들은 다 힘든 상황에서 늘어난 것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예전에 비해 늘어난 공무원 숫자는 또 무엇을 말합니까? 분명 그 월급은 세금일 것입니다. 지금 대학 도서관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처음 시험에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나면 철밥통 같은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철밥통 같은 미래는 꿈이 없을 것입니다. 경쟁을 하지 않고 발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작년에 체코 프라하의 LG 전자 판매법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LG전자 프라하법인의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삼성과 LG가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 외국의 기업은 LG나 삼성의 적수가 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경쟁을 통해서는 힘을 기를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 취업난에서 너무 미래를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늘어난 공무원이 줄어들지 않고서는 분명 국가의 지출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래저래 취업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교섭력이 약하다는 대통령의 말은 틀렸습니다. 이번 화물노조나 대한항공 노조가 파업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편할 때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뒷집지고 지켜보다가 일이 커지니까 중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정부의 할 일이 무엇입니까? 중간자의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보는 시각도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이 보는 시각도 정부가 노조 쪽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적용시키고 못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적용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잘사는 사람에게 많이 거둬들인 세금으로 못사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돕는다고 해서 나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보육원에 봉사를 자주 갑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씻겨줄 때 그 아이들은 스스로 씻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씻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당연히 봉사자들에게서 받는 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보통 가정의 아이들보다 더 자립심이 강해야 하는 아이들이 사람들의 선한 마음에 길들여져 자립심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정부에서 당연히 도와주는데 과연 내가 스스로 벗어날 필요가 있을까요? 저의 생각은 분배는 그냥 단순히 분배가 아닌 기회의 분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 보면 더더욱 일자리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밥통들은 늘어만 갈 것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제가 단순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집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집을 많이 공급해버리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급을 해야 한다면 건설경기는 다시 좋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는 두배의 효과를 얻을 것입니다. 정부 8.31 종합대책이후 정작 나아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하더군요. 언제 해답이 나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부의 힘으로 억제를 하려고 하더군요. 흘러가는 물을 억지로 막는다고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은 나중에 큰물로 모여서 큰 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즉,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화제를 바꿔, 현재 대학생들의 생각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생활은 학기 초 3~4월까지의 동기들이나 선배들과 어울려 술을 즐겨 마시고, 5월에는 대동제라는 축제를 명분으로 술 마시며 한 학기를 보냅니다.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지만 1학년이 도서관에 나타나면 안된다는 선배들의 말을 굳게 믿으며 1학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로 방학을 보냅니다. 2학기가 시작되면 대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해마다가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취업난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어 취업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학기 중에는 도서관과 집을 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된다면 빚을 저서라도 외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들과의 경쟁에서 남만큼 해도 뒤처지는 시기에 남보다 못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 스토리가 현재 짜여진 틀에서 흘러가는 대학가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대학가에서 내 자신도 못 추스릴 그런 상황에서 나라 걱정, 공동체 걱정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 정치에 무관심이 팽배한데 한총련이 왜 여전히 명분을 유지할까요? 그것은 한총련의 조직은 1학년과 아직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되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학생을 생각해서 한총련이 아닌 비운동권 학생회를 조직하려는 학생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선거 운동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총련 계열의 학생회는 오랫동안 집권하면서 신입생 새내기들을 교육하여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반미, 한민족 공조에 관한 교육과 역사 왜곡에 관한 교육입니다. 교과서에서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올라온 학생들이 한총련의 교육에 과연 의문을 품을 수 있을까요? 또 금강산 통일 기행이라는 명목의 소풍입니다. 금강산을 보고 온 학생들이 진정 북한에 대해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말했듯 금강산은 소풍이

지 절대 통일기행이라든지 북한을 바로알자라는 명목을 붙여서는 안됩니다. 동전의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듯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길러줘야 할 국가 및 학교, 선배들이 지금 자신의 일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평양축전이니 금강산이니 마치 통일이 다가온 듯한 분위기 조장으로 학생들을 혼돈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한총련은 반미와 한민족이라는 선동을 일삼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행태가 지금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대학가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모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강정구 교수의 발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사회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수 위치에 있는 것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교수는 대한민국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라면 당연히 역사라든가 세계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교수의 발언을 “학자적 발언이다”며 두둔하는 정부는 또 뭘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줘야 한다고... 또 북한에서 그 체제를 좋아한다면 다시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북한의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른바 좌편향적 교수가 몇 사람 있습니다. 그 교수의 말도 일리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 그렇게 현실적으로 구현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대학생이라는 정체성에 혼돈을 느끼는 상황에서 미래는 보여주지 못할망정 학생들을 선동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실은 왜 대학생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대학생들의 눈을 가리려고 합니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왜 굶어죽어 가고 있는지 또 사회적인 시스템에 문제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대학생들은 균형된 시각으로 여러 사실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는 편향된 시각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대학생들을 보면서 우리도 방학이면 여행, 세계 여행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여러 곳을 가볼 수 있는 여행을 가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학 때 토익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대학생들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 아닙니까?

끝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통령께서는 대학생들의 미래를 뺏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당연히 공무원 생활을 할 것이고 결혼해서 잘 살 거라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큰 꿈은 없고 그냥 화목한 삶, 그것이 꿈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청년이 꿈과 도전을 가지지 않는 한,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